

# 민주 '사법3법·상법' 추진 vs 국힘 '전면 필리버스터' 맞불

민주, 국회법 근거로 오늘 표결 예정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 처리 계획  
국힘 "독재 행위 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최장 7박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야 정쟁 법안인 법외국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 개헌 추진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 개정안, 이과 연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

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 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모든 상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의원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이외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함을 알리는 강력한 항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본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 소집에 여야 견해차가 커서 의장도 깊이 고심했다"면서 "합의가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무제한 토론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일정을 작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3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게 날치기밖에 없다"며 "소수야당이 '이 법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법사위 넘었다

행정·재정 특례, 지원 근거 담겨  
대전충남·대구경북은 표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하지만 함께 추진 하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지역 반대 여론을 이유로 표결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

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직접 던진 화두다. 이날 중 대전충남, 전남광

주, 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남광주 외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 반발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

북) 통합 추진을 맡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면 좋는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 민주당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대전충남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선처리한 만큼, 부작용 등을 보완하며 추후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논의도 순차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3법 중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 "상가 임대료 제한, 관리비 올리면 범죄"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관리비 직격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후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시한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올리면 안 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바가지질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상당히 많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데,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목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라는 지시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세로 내려가면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에서 3배 가량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

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 전문가와 소년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담당자들,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우리가 시민의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한번 두 달 안에 논의해 보자"고 주문했다.

또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법무부 소관인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부 소관 같다"며 "집단토론, 숙의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 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서예진 기자